

## 중국의 연구중심대학

**필**자는 최근 중국의 7개 대학을 방문해서 연구와 교육의 실태를 살펴 보았다. 중국에는 1,080개의 대학이 있으나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이 453개나 되며 학사학위만 수여하는 대학이 207교, 석사학위까지 수여하는 대학이 219교, 박사학위까지 수여하는 대학이 168교가 있다. 대학생수는 280만 명밖에 안 되므로 우리나라의 200만 명(전문대 포함)에 비하면 대학생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다.

1952년에 대학 제도를 소련식으로 개편하면서 종합대학에 속해 있던 의대, 농대, 사대 등을 모두 독립시키고 현재의 종합대학에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분야의 학과(系)만 있다. 淸華大學은 공과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인문·사회계 학과를 보강하고 있고, 북경대학은 공대와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대학을 흡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이공계 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모든 대학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성격에 따라 중국과학원, 야금부, 전자공업부, 화학공업부와 국방부에 속해 있는 대학이 많다. 교육위원회 산하의 대학 중 36개교와 정부의 타부서에 속한 대학까지 포함해서 60여 개의 대학이 중점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211계획'이라고 부르는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21세기에 백 개의 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대학들이 여기에 포함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1차로 北京大學, 淸華大學, 復旦大學, 西安交通大學, 上海交通大學 등이 선정되었다고 한다.

필자가 직접 방문한 7개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최근 세계은행 차관을 얻어서 첨단 기자재를 많이 구입하였으며, 풍부한 인력과 충분한 실험실 면적을 갖추고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강사, 조교로 되어 있는데 교원이 1,300명인 경우 실제로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은 7, 8백 명밖에 안 된다고 한다. 교수나 부교수의 직급을 가지고 있



포항공대 총장 장수영

으면서도 강의는 전혀 하지 않고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대학원은 연구생원이라고 부르며 석사과정은 지금까지는 3년제인데 점차 2년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대학원생수는 12만 명이며 이 중 7.5%가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와 다른 점은 과학원 산하의 연구소에서도 석·박사학위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1만 6천 명의 박사와 9만 명의 석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리고 정교수 중에서도 博士生導師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만이 박사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정교수 중에서 25~47%에 불과하다. 그보다 한 단계 상위급이 과학원과 공학원의 院士이며 이들은 정년이 없다.

시장경제 도입후 각 대학들이 기업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실패했거나 현상유지를 하고 있으나, 북경대학에서 십 년 전에 설립한 北大方正集團이라는 회사는 성공한 예이다. 북경대학 전산과 교수가 개발한 신문제작용 소프트웨어 판매가 주종이지만, 지금은 다른 분야에도 확대되고 있다. 그 회사 제품을 중국, 대만, 홍콩의 신문사들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한다. 직원은 1,200명이며 연간매출이 24억 元, 순이익이 1억 元인데 3천만 元을 북경대학에 출연하고 있다. 북경대학의 정부지원액이 7천만 元이라고 하니 대단한 성공이다.

또한 중국의 대학들을 연결하는 정보 고속도로인 CERNET가 이미 완성되어 백여 개 대학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홍콩과학기술대학에서 '동아시아연구대학협회'가 결성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 과기원, 포항공대가 창립 회원교가 되었으며, 중국에서는 淸華大, 北京大, 復旦大와 中國科技大, 일본에서는 東京大, 筑波大, 大阪大와 東京工業大, 대만에서는 台灣大學과 淸華大學이 선정되었고 홍콩과학기술대를 포함해서 14개 대학이 창립 회원교가 되었다. 매년 회원교끼리 모여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고 공동 교육과정 편성도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우리도 대학 전체의 10% 정도인 15~16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개편하여 충분한 연구 인력과 첨단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